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2호 | 2024년 1월 9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윤석열 대통령의 양 특검 거부권 행사 평가

- 헌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이며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위 -
한 상 익 수석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

- 제한적, 한정적 권한인 거부권의 신속 행사 - 헌법적,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의 결여
 - 민주국가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국왕이나 독재자의 무제한 권한이 아닌 한정적 권한으로서 헌법적,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사됨

■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정치적/윤리적 한계

- 거부권의 헌법적 연원, 정신을 고려할 때 6개 사유 중 하나 이상 있어야 정당화 가능
 - ① 위헌 ② 국가이익과 안보 침해 ③ 행정권 침해 ④ 행정적, 재정적으로 집행 불가능 ⑤ 정책적으로 대통령 입장과 배치 ⑥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률안의 경우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나 양 특검은 해당 없음
- 주권자인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거부권 행사
 - 특검 추진 찬성 의견 60% 내외, 거부권 반대 의견 65~70%의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률 이송 1일, 임시국무회의 개의 후 35분 만에 거부권 행사
-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정하고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
 - 특수 관계인 관련 사안 기피의 공직 윤리, 정치인의 책임 윤리에 어긋남

■ 양특검 거부권 행사의 평가와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이며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거부권 행사
 -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양심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숙고한 후 재의와 재의결에 응해야 함

▶ 키워드: 양 특검 거부권 행사, 헌법적/정치적/윤리적 부당성, 재의결의 충분한 숙고 필요성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50억 클럽 특검법¹⁾ 거부권²⁾ 행사

- 헌법적,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월 4일 이송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 국회의 재의를 요구
 - 양 특검법은 의원 재적 기준 각 60.6%(180/297), 60.9%(181/297)의 찬성율로 가결
 - 양 법안은 1월 4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1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건의되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
 - 법률안의 정부 이송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 소요되며 양 특검법도 의결부터 이송까지 7일이 소요됨
 -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법률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헌법 53조 ②) 국회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법/방송3법에 22일, 간호법에 19일, 양곡관리법에 12일이 소요되었으나 양 특검 거부는 8일 만에 실행
 - 양 특검 법안은 화요일 정기국무회의(1월 9일)에 거부권 행사가 건의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법률안 이송 다음날인 1월 5일 금요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불과 35분 만에 속전속결로 거부권이 재가된,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 거부권 행사를 기록함
- 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정치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률적, 윤리적인 거부권 행사자 적격성에도 문제 - 헌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이며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거부권 행사로 평가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왕이나 독재자의 자의적, 무제한적 거부권과는 달리 행사 요건과 효과에 제한이 있는 한정적 거부권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상호 동등한 권력분립과 견제의 헌법 정신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대통령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됨
 -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건으로 하고 국회의 재의 절차에 따라 거부권의 효력을 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 역시 거부권이 한정적 권한임을 의미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미와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거부권의 헌법적, 민주적, 윤리적 한계를 검토할 필요

1) 각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함.

2)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공식 명칭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서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다시 의논/처리를 요구할 권한임. 본 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부권’으로 지칭함.

- 양 특검 재의 요구는 탈헌법적, 반민주적, 비윤리적인 거부권 행사
 - 헌법학에서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 요건에 맞지 않는 탈헌법적이고 부당한 거부권 행사
 - 오만하게 국민 다수의 거부권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반민주적 행위이며,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권력을 악용해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행동
- 거부권의 의미와 의의, 한계에 따라 양 특검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자세히 검토함

2.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제도 특성

○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의미와 의의

-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을 공포하여 확정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국가 안전,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평화적 통일 추진과 민족문화 창달 의무³⁾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됨
- 의회가 입법권을 신중하게 수행하도록 견제하고 부당한 법률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며 공공선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를 보위하기 위한 대통령의 입법 관여 권한
 - 거부권의 전제 조건은 ‘반대할 만한 법안(Objectionable legislation)’⁴⁾의 존재이며 행사의 필요조건은 ‘헌법과 국가 안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확신
- 대등한 민주적 정통성(국민 직선에 의한 선출)을 가진 의회 다수와 대통령간의 법률안 해석 차이이므로 입법권을 무효화하는 절대 권한이 아닌 견제하는 한정적 권한
 - 의회와 대통령 양자 어느 쪽의 해석이 옳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재의 요구의 위협, 혹은 행사로 입법권을 견제하는 효력만을 가짐
 - 최종적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부정될 수 있음
 - 의회에서 찬성 재의결되는 경우 대통령은 공포하고 집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대통령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 거부권은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 거부권 행사 방식은 환부거부와 보류거부로 구분됨
 -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에 법안을 환부, 재의를 요구하는 환부거부와 대통령이 정해진

3)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69조에 규정된 취임 선서로 요약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 울리(J. Woolley)는 배타주의적 법안, 대통령 이념과 반대되는 법안, 기술적 결함 있는 법안 등을 반대할만한 법안으로 들고 있다. Woolley, J. T. (1991). Institutions, the election cycle, and the presidential veto.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9-304.

기간 내(미국 10일, 한국 15일) 법안 서명/공포하지 않는 보류거부가 있음

- 한국 헌법은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대통령은 환부거부만 가능
- 거부권 행사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음
 - 방어적 거부권 : 행정권을 침해하려는 입법부의 시도로부터 행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
=> 2015년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규정한 국회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 균형자적 거부권 : 국민 부담으로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포퓰리즘적 법안에 대해 전체 형평성을 들어 행사되는 거부권 => 2008년 지자체 부담을 국가가 대신하도록 한 학교용지 부담 환급금 특별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 도구적 거부권 : 거부권을 행사가 아닌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법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우
=> 2012년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법안 폐기

○ 외국도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법률안 재의 요구 제도는 존재함

- 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제도로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
 - 미국은 연방헌법 1조 제7절에 대통령의 독임 권한으로, 프랑스는 제10조 2항에 수상 및 관계장관 부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체코 등도 유사
 - 재의 요구 시 의결정족수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한국, 미국은 재의시 2/3 찬성), 동일한 의결정족수로 재의하는 국가(프랑스)도 있음
- 의회정부제 국가에서도 국왕 또는 대통령, 상원의 거부권을 명시하는 국가들이 있음.
 - 영국, 노르웨이 등은 국왕의 거부권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잘 행사되지 않고⁵⁾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대통령이,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참의원(일본) 또는 연방 상원에 중의원/하원에 재의를 요구할 권한을 인정

○ 해외 국가 대부분 재의 요구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학적으로 거부권 행사에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임

- 정치와 입법 상황의 역동성을 감안, 대부분 거부권에 사유 조건을 붙이지는 않음
 - 거부권을 명시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은 사유서를 첨부해 환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사유는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법률로 거부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미가 있지만, 의회의 입법안을 거부하는 권한에 의회가 법률로 거부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의견 역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절대적,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외적, 내적 사유를 만족할 때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로 거부권을 명시한 미국은 '위헌과 국가 방위 위협 법률에 한정'해야 한다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주장과 헌법적 이유에만 국한할 필요 없이 사회

5) 영국은 1707년 이후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호에 필요하면 행사해야 한다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논쟁이 존재

- 다만, 적극적 거부권 행사론자인 해밀턴도 ① 거부권은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해야 하며 ② 헌법 보호와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⁶⁾하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하며 ③ 대통령이 개인적 이유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주장한 바 있음

3. 양 특검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위반 검토 – 헌법적으로 부당한 거부권 행사

○ 거부권 규정의 헌법적 연원과 정신을 고려할 때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

- 주로 ① 위헌 ② 국가이익과 안보 침해 ③ 행정권 침해 ④ 행정, 재정적으로 집행 불가능 ⑤ 정책적으로 대통령 입장과 배치 ⑥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률안의 경우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
- ⑤와 ⑥의 경우 정책적 배치나 행정부에 대한 압력의 부당성 사유는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에서 앞의 네 가지 사유와 성격이 달라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존재함

○ 양 특검법은 위의 거부권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위헌적 법률안인가?

- 법무부의 사유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위헌임을 주장
- => 한국 헌법은 국회 의결에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49조), 여야 합의가 없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법률들이 위헌이라는 반헌법적 주장이 될 우려가 큼
- 과잉수사로 대통령은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주장
- => 지난 1년간 한 가족에 대해서만도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피의자들을 자살로 내몬 정부가 자신과 자신 가족, 주변 인사가 피의자인 수사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
- => 특검이 의결된 것은 검찰이 야권에는 과잉수사를, 여권에는 과소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소수사를 한 법무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양 특검법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음

② 국가이익이나 안보를 침해하는가?

- 권력에 의해 묻혀진 과거 범죄의 수사과 처벌이 국가이익이나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친일 매국노, 박정희/전두환식 군부 쿠데타 반역 세력의 논리
- 법무부 사유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음
- 권력자의 범죄 사실 은폐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은 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 통합과 법질서

6)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 심판'으로 사법권이 사후 거부하게 됨.

신뢰를 제고하여 오히려 국가이익에 이바지함

■ 양 특검법의 국가이익, 안보 침해성은 없으며, 오히려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함

③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가?

- 특별검사는 행정부에 속한 검찰권이 불공정하고 불충분하게 실행되는 경우 이를 밝혀내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 제도
 - 민주화 이후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제도가 새삼스럽게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박근혜 특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양 특검법의 행정권 부당 침해 없음

④ 행정, 재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가?

- 국회예산정책처는 양 특검 예산으로 81억원을 추산
 - 민주화 이후 특검은 14억~31억(박근혜 특검) 등이 소요되었는바, 양 특검을 합하여 총 81억원은 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상식적 수준으로 평가
 - 법무부는 특별한 추산 없이 ‘수백억원대’ 형세 비용을 주장
- => 정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추측이나 과장, 망상에 기대서는 안 됨
- => 5천만 인구, 656조원의 예산을 가진 한국에서 100여명의 특검 인력과 100억원 남짓의 특검 비용 집행이 행정,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 양 특검법의 행정, 재정적 집행 불가능성 없음

⑤ 정책적으로 대통령 입장과 배치되는가?

-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와 ‘법질서’를 공언해 왔는바, 양 특검법은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성과 일치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임명후, 심지어 국제회의인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장
 - 성역 없는 수사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므로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 주변 인사에 대한 수사 역사 대통령의 지향과 일치
- 법무부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지 사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음

■ 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과 완벽하게 일치함

⑥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률안인가?

- 양 특검의 대상은 행정부 소속 인사가 아님
 - 윤석열 대통령이 50억 특검법에 관련되었다 해도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며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의 배우자일뿐 공식적 직위를 가진 행정부 소속 인사가 아님
-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 방해 우려라는 법무부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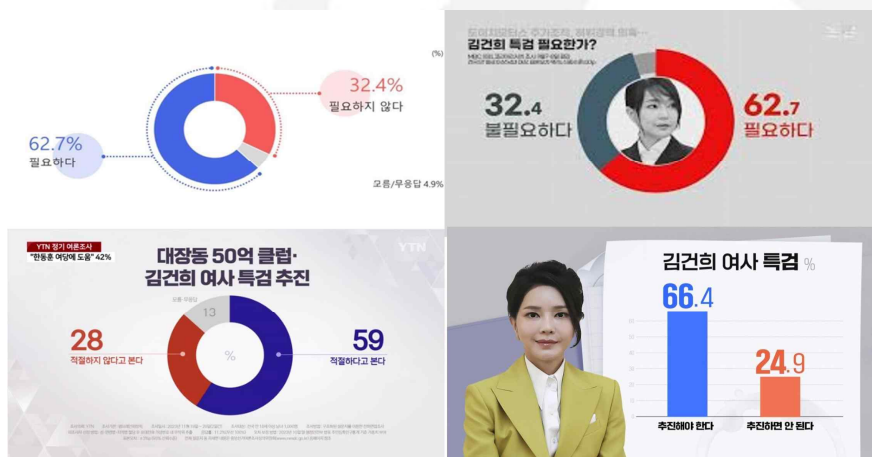
- => 거의 2년간 수사했음에도 박영수 변호사 구속 기소, 객상도 전의원 아들 불구속 기소, 객상도 무죄 등 수사 활동과 성과는 매우 초라한 것이 특검법을 초래
- => 50억 클럽 특검법을 만든 이유가 거부권 이유라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범죄 수사가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범죄 소굴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발상임

■ **양 특검법은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음**

4. 양 특검법 거부권의 정치적 한계 위반 검토 –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

-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공직자가 주권자 다수의 의지에 반해 국정을 운영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민주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음
 - 공직자가 주권자 다수 의지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반민주적 행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임
 - 해당 사안에 대해 주권자가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시도해야 함
 - 주권자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따를 때 국가이익과 안보, 인간 존중의 원리, 국민의 자유와 복지, 국민 간 형평성에 명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심각한 위협 가능성이 존재해야 함
 - 공식적 투표를 통해 주권자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국민 여론은 주권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
 -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의견 차이는 국민 다수의 의견 분포를 반영함
- 양 특검,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찬성 비율 및 거부권 행사 반대 비율은 압도적
 - 국민의 60% 내외가 특검 추진을 찬성하여 반대 여론의 2배 수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 비율은 더 높아 65~70%로 반대 여론의 2.5~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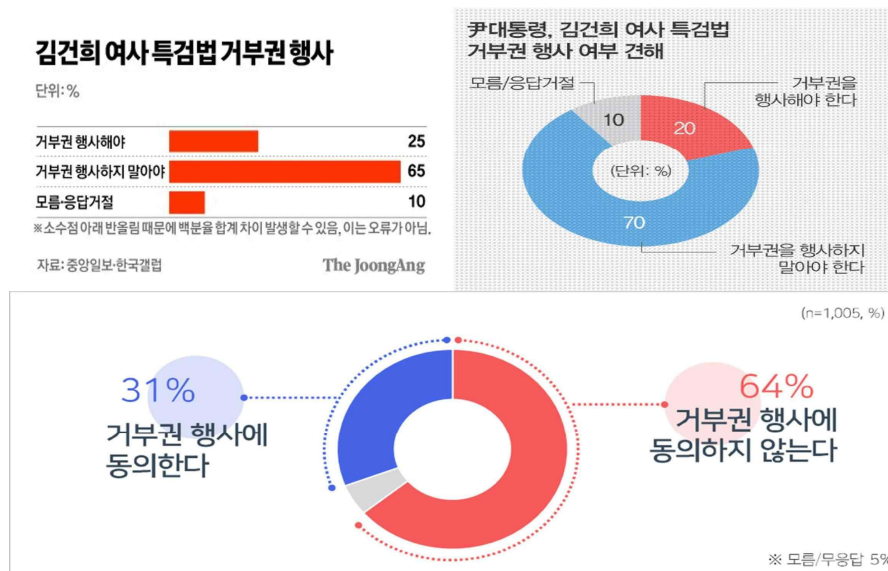
그림 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추진 여론조사 현황



주) 왼쪽부터 MBC(22.9), 한겨레(22.9), YTN(23.12) SBS(23.2) 조사 결과

- ‘국민이 항상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를 사전 소통이나 설명 없이 실행

그림 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거부권 행사 여론조사 현황



주) 왼쪽부터 중앙일보(24.1), 국민일보(23.12), MBC(24.1) 조사 결과

- 총선용,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며 총선용 특검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법무부 주장은 오히려 특검 거부가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줌
 - 특검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및 재판 중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표 수사 및 특검 수사 진행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 => 특검이 진행되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인사 수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인데, 이 둘을 엮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의원 수사가 정파적 수사임을 자인하는 꼴
 - 공정한 선거 관리의 의무 때문에 거부한다는 법무부 사유 제출도 언어도단임
 - => 야당 인사 수사에서 범죄 수사와 공정한 선거 관리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는 것은 자가당착
 - => 2023년 4월 특검법 의결을 거부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바, 선거 직전인 현재 처리된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했는데도 적반하장
- 헌법 및 국익 수호, 국민 보호를 위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정파적 고려에 따라 행사하고, 나아가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원리를 부정하는 것
-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부 다수 의견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하게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 1987년 민주화 이후 총 24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 그 중 1/3에 달하는 8건의 법률안에, 그것도 임기 1년 8개월 만에 거부권을 행사함

표 1> 민주화 이후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율

대통령	기간	거부 법률안 수	비율
노태우	5년	7	29.2%
김영삼	5년	0	0%
김대중	5년	0	0%
노무현	5년	6	25.0%
이명박	5년	1	4.2%
박근혜	4년 1개월	2	8.3%
문재인	5년	0	0%
윤석열	1년 8개월	8	33.3%
합계		24	100%

- 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평등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한 행사로서 공직자 권한 행사의 정치적 한계를 벗어나 있음

■ 양 특검법의 거부는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거부권 행사임

5. 양 특검법 거부권의 윤리적 한계 위반 검토 - 오만하고 비윤리적인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됨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이란 공직에 부여된 특권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역대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직계 가족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검이 발의 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표 2>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 및 형량

대통령	가족관계	관련 사건 및 수사 형태	형량
김영삼	김현철(아들)	한보그룹 대출 비리(검찰 수사)	징역 2년
김대중	김홍걸(아들)	최규선 게이트(검찰 수사)	징역 2년 (집행유예)
노무현	노건평(형)	박연차 게이트(검찰 수사)	징역 2년 6월
이명박	이상득(형)	저축은행, 포스코 비리	징역 2년
	이시형(아들)	내곡동 사저 매입(특검)	불기소
윤석열	최은순(장모)	은행 잔고증명 위조(검찰 수사)	징역 1년
	김건희(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특검)	거부권 행사

- 이에 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년간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결된 특검 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음
- 50억 클럽 특검 역시 대통령 본인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특검으로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나 실제적 진실은 밝혀질 가능성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호질기의(護疾忌醫)⁷⁾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본인/가족 등 특수관계인 이해가 관련된 공적 사안에의 관여 기피는 공직윤리의 기본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7) 오만과 독선으로 내 잘못을 덮어 감추고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성리학 창시자 중 한 명인 주돈이가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치 병을 숨기며 의사를 피하니, 몸을 망치는 일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 말한 것에서 연원

○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 거부권 행사는 이 책임 윤리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 수사와 특검에 관해 매우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대통령 당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임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역 없는 수사”, “부정부패에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강조했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되풀이함
 - 특검에 관해서도 후보 시절 “땃땃하면... 권력자도 조사받고 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 지었으니 하는 것이다.”라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특검에 관한 태도는 “아시타비(我是他非)”, “방약무인”으로 요약됨
 - 수사 미진과 특검 거부는 같은 사안에 “나와 내 가족은 잘못이 없고 남들은 범죄자”라는 관점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음
 - 국민 60%가 찬성하는 특검에 70% 가까이가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과 소통,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

■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직 윤리와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비윤리적 행위

6. 양 특검 국회 재의 표결과 국회의원의 의무와 양심

- 윤석열 대통령의 양 특검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이며 공직자로서 비윤리적
 - 양 특검법 거부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것 역시 정당성 없는 대통령 행위에 대한 맹종일 뿐
- 국회는 마땅히 재의 가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 하며, 개개인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충분한 숙고와 행동을 해야 함
 - 국회의 재의는 국회의원, 특히 대통령과 당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양심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